

# “전라도 천년사 논란 하루빨리 종지부 찍어야”

### 이병도 도의원, 도정질문서 표절 문제 거론 도, 표절검사 결과 뒤늦게 ‘표절 있음’ 시인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이 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도 천년사의 표절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라도천년사는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진 이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정도(定道) 천년을 기념해 아쉽게 준비한 사업이 애물단지처럼 전락해 버린 것이다.

실상가상으로 표절문제까지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전북연구원도 집필진으로 하여금 원고 유사도율을 20% 이하로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고, 개별 필진별로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 표절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사도율 20%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는 게 도 담당부서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도정질문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표절사실을 시인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절 여부에 관해서 며칠 사이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특히,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활용하여 도출된 표절검사 결과 중에는 68%의 유사도율이 확인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수위원회에 의한 표절검사 여부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일관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 의문을 키우고 있다.

도는 표절검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감수위원으로 하여금 원고의 유사도율 20% 이하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답해왔다. 하지만 정작 도지사 답변에서는 감수위원이 직접 표

절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표절 문제와 함께 집필진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한 행정처리 원칙을 훼손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김관영 지사는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집필진 명단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의 서류제출(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국민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은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에 대한 전체 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행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병도 의원은 “감출수록 논란만 커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천년사 편찬사업”이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서 피로도가 점점으로 치닫고 있는 천년사 논란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제2회 전북 CEO 지식향연 19일 전주라한호텔에서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제2회 전북 CEO 지식향연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한중권 전북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소상공인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 “2007년 친환경 어구 보급 위해 207억 투입해도 보급률은 제자리”

### 민주 윤준병 의원



지난 2007년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보급률은 한자리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 어구 보급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20년 44억4,900만원 △2021년 52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59억원으로 총 207억 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은 어

선은 전체 조업에 나선 어선 대비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각 연도별 보급률은 △2020년 4.1%, △2021년 3.9%, △2022년 4.1%, △2023년 1~7월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 역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기준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올해 1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내에서 조업에 나선 전체 3,362척 중 261척(13.9%)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 8.8%, 인천 7.6%, 강원 5.5% 순이었다.

반면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낮

은 지역은 경남으로, 올해 4억 4,500만원을 투입해 전체 5,207척 중 단 39척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0.7%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전남 2.7%, 전북 3.6%, 제주 4.9%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높은 가격과 높은 가격 대비 사용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어구 성능 불신 등이 꼽힌다.

실제 작년 기준 친환경 어구의 기준 단가를 보면, 꽃게자랑(그물)의 경우 친환경 어구가 1만8,355원으로 수입산 나일론 어구 가격(2,931원) 대비 6.6배가 높았다. 참조기자랑 역시 친환경 어구 가격이 11만3,280원으로 기존 어구 대비 4배가 높았으며, 붉은대게 자랑 3.4배, 대게자랑 3.2배, 물메기자랑 3배 등 모두 가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음=김대환 기자

##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동부권 예산 7.3%만 반영”

### 이정린 도의원, “동부권 발전 특례 발굴, 사업화 해야” 도교육청에 “IB 프로그램 공교육 혁신 방안 활용 필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19일 제40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전북도 균형발전 방안과 전북 교육청 IB(국제 바칼로레아) 도입과 관련해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에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전북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도지사의 공약은 새만금과 서부권에 쏠려 있어 동부권은 소외되고 있다”며 “김관영 지사의 공약 실천계획상 사업의 가짓수는 38.1%지만 투자예산은 7.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김관영 지사 공약실천계획 전체 124개 중 해당지역이 명시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64개를 분석한 결과 동부권 사업은 25개로 가짓수로는 40%에 이르지만 예산으로 보면 약 6조 9,000억 중 5,130억인 7.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공약을 선점하면서 가능한 지역별로 고루 배

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낙후지역 사업발굴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정린 의원은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사의 공약을 수용하겠지만 14개 시군의 편차없는 균형적 발전 역시 지사의 책임”이라면서 “전북 특자도 출범과 관련해 동부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부권은 준고령지 농업 경쟁력이 높다는 점과 관련해 특례에 담긴 농생명지구와 연결하여 동부권은 물론 전북의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거석 교육감에게는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수한 프로그램이지만 수능과의 연계성 초·중·고 간 교육 지속성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은 “IB 도입을 위한 교원 연수 등에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IB 도입이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전라북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 박정규·김명지 도의원 새만금 예산 복원 릴레이 단식

전라북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전주11)과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임실)이 19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김명지 위원장은 “새만금SOC 예산 대폭 삭감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도민에게 상처를 준 현정부의 무자비함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도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예산 복원을 이뤄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정규 위원장은 “모든 투쟁의 목표는 승리이며, 지금의 승리는 새만금 예산을 살리고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며 “다음달 7일 예정된 범도민 총궐기대회까지 500만 전북인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박용근 도의원, 전북-경북 친선교류 ‘국무총리상’ 수상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은 19일 제25차 국민회합(전북-경북) 친선교류행사에서 영광과 명예스러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호국유지 고취를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박용근 의원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김희수 도의원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실효성 대책 마련을”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청년 실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원한 청년들은 대거 중도 퇴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에 따르면 “전북 청년실업률은 2021년 5.9%, 2022년 6.0%, 2023년 2분기는 12.2%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의 부정수급으로 정책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회소 및 부정수급은 17건으로 기업의 사업장 점검과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해 청년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사 기업지원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독서의 계절. 1kWh 줄이기로부터 시작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TV와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은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하루 1kWh 줄이기를 실천해보세요.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하루 1kWh 줄이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 0.32 kWh/일